

제21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국문 요약


제21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은 AGAC 글로벌 자문단과 함께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글로벌 자문단은 유럽, 아시아, 북미를 대표하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시민사회, 싱크탱크, 의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GAC 글로벌 자문단 명단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asemgac.org)

이번 회의는 3월 27일 개최되었으며, Thanh Long Giang 교수(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 Titti Mattsson 교수(스웨덴 룬드대학교), Kai Leichsenring 박사(오스트리아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 전 소장), Margaret Young(GAROP 전 의장, 캐나다 Age Knowble 설립자)이 참여하였습니다. AGAC에서는 서정하 원장, 최성재 이사장, 고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네 명의 참가자가 최근 수행한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노인 인권과 관련된 주요 발전과 동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습니다.

최성재 이사장은 먼저 자문단 참여와 그간 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이어 서정하 원장은 신임 원장으로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고근 사무국장은 정책 연구,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개최, 정기간행물 <Issue Focus> 발간 등 2025년도 센터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AGAC의 주요 활동을 개괄하고, 각 자문위원의 연구 및 전문 활동과 글로벌 동향에 대한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본 회의는 자문위원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AGAC 운영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협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협력 강화와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presentation slide with the following content:

- Who Decides: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Matter to Older Persons with Dementia**
- 
- 140 participants
- 2 Keynotes
- 8 panelists – global, cross-sector, older persons with dementia
- Key learnings – six principles, three cross-cutting themes, imperatives

Event highlight: [Showreel: Who Decides?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Matter to Older Persons with Dementia](#)
[Who Decide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Matter to Older Persons with Dementia. - Age Knowble](#)

Global Rally

© 2026 AgeKnowble 3

Kai Leichsenring 박사 (오스트리아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 전 소장)

Leichsenring 박사는 자신의 최근 직무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3월 1일부로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 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은퇴를 앞두고 연구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행정적 업무에서 벗어나 고령화 및 노인 관련 연구에 보다 집중하고, 프로젝트 중심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소개한 주요 연구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 사회부와 협력하여 수행 중인 노인 대상 폭력 및 학대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단위 조사를 준비하여 노인 학대의 발생률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실제 조사가 시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방법론적 틀과 조사 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연구가 매우 복잡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와 민감한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준비 단계는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결과는 국제 비교 연구 및 타 국가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스웨덴 보건사회부 의뢰로 수행된 비공식 돌봄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발전된 장기요양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에서 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이미 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제도와 실제 실행 간의 괴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 분석이 아닌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비공식 돌봄 분야의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지원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 전달 문제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도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혜택을 남용하는 것으로 의심받기도 하며,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인식 개선과 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슬로베니아의 장기요양제도 도입 지원 프로젝트를 설명하였습니다. 20년 이상의 논의 끝에 슬로베니아는 장기요양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는 분절된 시스템을 통합적 장기요양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권리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 역량에는 심각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인력 부족과 조직 역량 부족으로 인해 법적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장기요양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병목 현상도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접점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 평가를 받기까지 6~7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T 인프라가 미흡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인력 부족과 서비스 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지역 실행 계획 수립, 공공 및 민간 제공자 참여 확대 등의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과 시설 돌봄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25주년과 관련된 논의를 언급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지역 실행 전략 업데이트와 장관급 회의를 준비 중이며, 아시아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Thanh Long Giang 교수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의 Giang 교수는 베트남의 고령화와 관련된 최근 정책 변화, 연구 활동,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보건부 및 내무부의 자문위원으로서 고령화, 보건,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 인권에 대한 국가 및 지역적 관점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베트남에서 급속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약 6개의 주요 정책 문서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정책 방향과 실행 체계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2045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고령화 전략, 사회보험 제도의 확대, 인구 관련 법률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의 노인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정책 변화 중 하나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예방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며, 1차 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감염성 질환의 증가와 질병 발생 시기의 조기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시에 행정 구조 개편과 지역사회 기반 보건 시스템 확대를 통해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세대통합 자조모임(Intergenerational Self-Help Club)'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000개 이상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사회참여, 정서적 지원, 소득 창출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입니다.

Giang 교수는 자신의 연구 활동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UNFPA와 협력하여 저출산과 그 영향에 관한 정책 브리프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에서도 중요한 인구학적 과제임을 반영합니다. 또한 UNDP와 협력하여 고령화 사회를 위한 사회보장 체계를 연구하였고, 공공 돌봄시설

의 수요와 수혜자 규모를 예측하여 보건부의 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협력하여 Active Ageing Index, 아시아 노인을 위한 장애지수, 재정 준비도 지수 등 다양한 국제 비교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서로 다른 소득 수준과 고령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지역적 과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경제 발전 수준과 인구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낮은 연금 보장률, 높은 개인 의료비 부담, 미흡한 장기 요양 시스템, 제한적인 사회참여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베트남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 지역사회, 시설 돌봄 간 분절된 구조를 통합하는 장기요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단순한 권장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AGAC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정기적인 웨비나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노인 학대, 건강 영향, 재취업 문제 등을 다국가 연구의 주요 주제로 제시하며, 현실적이고 맥락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간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돌봄 인력의 해외 이동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베트남은 일본 등으로 많은 돌봄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귀국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도적 기반과 보상 체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인력이 다시 해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요와 제도 역량 간 구조적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Titti Mattsson 교수 (스웨덴 룬드대학교)

Mattsson 교수는 스웨덴의 고령화 현상, 제도적 과제, 그리고 인공지능 및 인권과 관련된 신형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녀는 고령화 자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정치적 대응은 과학적 이해에 비해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에서는 고령 인구 증가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정책 논의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스웨덴 인구의 약 25%가 65세 이상이며,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인 돌봄, 노동력 확보, 서비스 지속성 등 공공 복지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력한 공공 돌봄 체계에 의존해 왔으나, 수요 증가

에 비해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비공식 돌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웨덴 복지 모델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내 불평등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특정 법적 보호를 받는 집단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인력이 지정되는 재가 돌봄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지역별로 운영 수준이 달라 서비스 연속성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조적 문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돌봄 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주거, 재가 돌봄, 시설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독, 정신건강 문제, 미충족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남성의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가 있습니다. 특히 돌봄 환경 내에서 절도, 학대,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정부는 조사와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제공자가 가해자인 경우 노인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돌봄 패러다임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가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노인의 자율성은 증가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과 아동 대상 가정폭력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연령주의(ageism)는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집니다. 높은 역량과 경험을 가진 노인들도 고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그녀는 복지 정책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AI를 효율성, 접근성, 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사용성, 이해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참여와 자립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U AI 법에 대해 언급하며, 고위험 AI를 규제하고 일부 유해한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인을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Margaret Young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전 의장, 캐나다 Age Knowble 설립자)

Young 전 의장은 노인 인권에 대한 글로벌 관점을 제시하며, 특히 유엔 협약 개발과 관련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와 관련된 과제는 대부분 보편적이지만 문화적·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녀는 중국계 캐나다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존엄(dignity)' 개념 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자율성, 서비스 접근성, 발언권과 같은 핵심 요소는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나, 개인주의 사회와 집단주의 사회 간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세대 간 관계, 공동체 소속감, 상호 존중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습니다.

Young 전 의장은 의미 있고 효과적인 협약은 다양성에 기반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기본 원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와 같은 일반 원칙이 인공지능이나 노인 학대와 같은 새로운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해석과 적용을 이끄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노인을 위한 인권 원칙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 결과를 소개하며, '인격성(personhood)'이 핵심 원칙으로 도출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 상황에서도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 논의와 관련하여, 그녀는 정부간 실무그룹(IGWG)이 현재 협약 초안 작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이 과정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참여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지지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보다 적극적인 옹호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현재 단계—즉 개념적 틀과 일반 원칙을 정립하는 과정—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포괄적이고 유연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협약의 효과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종합 토론 (DISCUSSION)

라운드테이블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AGAC의 향후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장은 이 세션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전략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논의는 인공지능(AI), 연령주의(ageism), 인권 교육, 국제 협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AI는 주요한 신흥 이슈로 지목되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 낙상 예방, 사회적 상호작용 지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율성, 정체성, 잠재적 피해와 관련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적 관점이 아닌 인권 중심의 관점에서 AI를 평가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유엔 협약 논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탐색 단계에서 실제 초안 작성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핵심 추진 주체로 강조되었으며, 보다 포괄적인 참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연령주의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령 기반 정책과 제도적 구조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와 목표 지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자료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교류, 지역사회 참여,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인식 제고와 상호 이해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과 정책 정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AA)과 같은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며, 보다 강력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논의는 노인 인권이 기술, 노동, 복지, 문화,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급속한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리 기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